

동아시아 다자주의와 남북한 IT협력: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

김 상 배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p><차 례></p> <p>I. 머리말</p> <p>II. 동아시아 IT협력(1): 담론</p> <p>III. 동아시아 IT협력(2): 구조</p> <p>IV. 동아시아 IT협력(3): 제도</p> <p>V. 동아시아 다자주의 속의 남북한 IT협력</p> <p style="padding-left: 20px;">1. 남북한 IT협력의 현황</p> <p style="padding-left: 20px;">2. 남북한 IT협력의 방향 모색</p> <p>VI. 맺음말</p>

I. 머리말

최근 남북한 IT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IT분야가 던지는 미래 발전 가능성, IT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 IT분야 남북한 간의 비교우위 등에서 비롯되는 낙관적 전망이 피어오르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벌이는 양자 간, 다자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IT분야의 교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면 동결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 게임으로 인식되는 IT분야에서 외부적 조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리며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거북이의 걸음을 하는 핵협상의 속도에 비해서 IT분야의 변화는 토끼의 달음박질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희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나마 남북한 간 협력의 맹아를 보이던 몇몇 IT분야에서 마저도 주변국들에게 기회를 빼앗길 것이 우려된다.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소란스러울지라도 어떠한 형태로건 남북한 IT협력은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남북한 IT협력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남북한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전략적 분야는 어디이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향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길인가?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영역은 어디이며 남북한이 인식을 공유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IT분야에서 남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제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이며, 이에 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던지다 보면 남북한 IT협력의 문제가 남북한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IT협력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문제라는 ‘자명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특히

IT분야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에서 남북한만을 따로 떼어내 양자 간 협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IT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관점에서 남북한 IT협력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향후의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이 글은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¹⁾ 세계정치론의 시각을 제안한다. 기존의 국가 간 관계를 탐구하는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international politics)의 시각은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결국 21세기 변화하는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세계정치 및 남북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학’ 또는 ‘망제정치학(網際政治學, internetwork politics)’의 시각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은 물리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최근 학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²⁾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은 행위자로서의 노드(node)보다는 노드 간의 관계, 즉 링크(link) 및 이들 노드와 링크가 만드는 체계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다자주의는 국민국가 중심의 노드 국제정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일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 IT협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와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시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남북한 IT협력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네트워크(network)’ 속의 ‘링크(link)’가 안고 있는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등장하고 있는 ‘전방위형 네트워크(all-channel network)’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이라는 노드(node)간에 발견되는 빠진 고리(missing link)를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것이냐는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발상은 소위 ‘동북아 IT허브국가론’ 식으로 주변의 네트워크 환경을 무시하는 근대적인 노드형 발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발상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담당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양자 간, 다자 간 이해관계의 링크(link)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IT산업의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 각국이 담당하는 노드와 링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 IT협력에 이해관계가 걸린 주변국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한 IT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국제적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미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이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 일본이나 중국 및 러시아의 참여 문제 등에서 나타

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의 개념적 연계(nexus)는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지식(power/knowledge)’에서 힌트를 얻어서 고안되었다. 푸코가 권력/지식이라는 용어에서 지식을 근대적인 의미에서 권력에 종속된 도구의 의미로서 그리고 있다면, 지식의 생산·활용·공유 과정이 특정한 권력담지자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화시대의 특징을 그려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식/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2004) pp.167-194

2)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로는 Barabási(2002)와 Urry(2003; 2004)를 참조. 또한 네트워크 이론의 국내 국제정치학계에 대한 소개로는 민병원(2004)와 김상배(2005)을 참조.

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짜여지는 IT분야의 다층적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남북한만의 단선적 네트워킹(linear networking)의 전략은 동아시아 전체 네트워크의 변동에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는 국가만을 노드 행위자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단체도 포함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과 민간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조율은 필수이다. 요컨대 남북한 IT협력은 동아시아 IT협력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남북한 IT협력의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하나는 IT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는 남북한 IT협력의 문제를 남북경협외의 하위 개념이 아닌 남북한 '지식협력'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설정해 보는 문제로 통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IT협력이라는 연관 속에서 본 남북한 IT협력은 동아시아 정치군사질서나 경제질서의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21세기 '지식질서(knowledge order)'를 모색한다는 식의 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³⁾ 특히 소위 정보화 분야에서 그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식협력'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식질서란 지식(이 글에서는 주로 IT)의 생산·전파·소비를 둘러싸고 발견되는 능력의 분포, 제도의 형태, 공유된 관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질서의 변동에 대한 이해는 안보, 경제, 문화 영역의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전반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주로 지식질서가 경제질서(특히 생산질서) 또는 부분적으로 문화질서와 중첩되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IT산업의 지식질서에 초점을 맞추었다.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네트워크와 지식의 두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남북한 IT협력의 문제를 동아시아 IT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풀어나가려고 한다.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쟁과 협력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적 협력의 당위성을 직접 도출하는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다.⁵⁾ 그러나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와

3) 지식질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별로 없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또는 성찰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진영이 지식 변수가 국제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소홀히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참고할만한 연구로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E. 하아스(Ernst B. Haas)의 지식과 국제기구, 러기(John Ruggie)의 다자주의, 셀(Susan Sell)의 지식과 국제레짐, P. 하아스(Peter M. Haas)의 인식공동체, 갈통(Johan Galtung)의 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94); Ernst B. Haas, *When Knowledge is Power: Three Models of Chan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3-47; Susan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eter M. Haas,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7);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 (1971).

4) 이 글이 설정한 주제의 범위 내에서는 안보질서와 지식질서가 중첩되는 부분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IT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변수로 작동하는 바세나르 협약의 존재가 그것이다.

5) 여태까지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정책연구는 상당수가 이루어졌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분석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웅희,

제도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IT담론이 담고 서 있는 물질적 조건과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에 대한 좀 더 냉철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IT산업의 물질적 조건에 비추어 동아시아의 IT담론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IT담론이 일시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좀 더 진전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협력구상이나 제도적 틀에 대한 정비작업과 함께 현재 마련된 물질적 기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아시아 IT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IT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컨대, 현재 정치군사 중심의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서 장밋빛 희망과 회색빛 비관을 오락가락하는 남북한 IT협력의 현황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학계의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한 문제 자체에 대한 단기적 정책처방 그 자체보다는 동아시아의 네트워크(더 나아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전략 추진의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출현한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아시아 IT담론이 제기하는 논의의 근거와 내용을 남북한 IT협력의 담론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 가능성을 IT산업을 둘러싸고 형성된 지식구조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글로벌 지식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IT패권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분석적으로 밝힘으로써 남북한 IT협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현주소를 위치지우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IT담론의 제도화 가능성을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도모델의 기본성격과 그 한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이라는 시각에서 남북한 IT협력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 IT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 특히 네트워크와 지식으로 파악된 동아시아 다자주의 속에서 남북한 IT협력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동아시아 다자주의 맥락에서 파악된 남북한 IT협력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II. 동아시아 IT협력(1): 담론

남북한 IT협력의 담론은 좁게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전초적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선도적인 역할, 국민들의 높은 질서의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일본연구논총』 제17집, (2003), pp.75-101;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35-56; 김상배, “동북아 IT협력: 2020년 국가전략의 시각,”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제13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5); Ngai-Ling Sum,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2003), pp.373-398; Takuma Takahashi and Fujio Namiki, “Three Attempts at 'de-Wintelization': Japan's TRON Project, the US Government's Suits against Wintel, and the Entry of Java and Linux,” *Research Policy*, 32(9), (October 2003), pp.1589-1606

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안정, 국민들의 높은 성취의욕과 노동윤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열,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미국과 서구의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우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동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 원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이제 오히려 동아시아의 좌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신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형 자유시장모델과 미국적 가치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집중 거론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에서도 정부, 정치권, 경제의 구조 조정을 논하는 데 제시되는 기준은 개인과 조직의 능력과 경쟁력, 효율성을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식 제도와 가치들이었다.⁶⁾

그렇다면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는 과연 그 적실성을 상실하였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의 효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대안은 미국식 경제체제와 가치관을 수용하는 길뿐인가? 역설적인 것이 1997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담론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경제지구화가 국가·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국가·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 수준의 경제적 상호협력력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다시금 공세적인 모습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최근 IT분야에서 동아시아 기업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정보화 시대에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생명력을 예견케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그 생성과 부활의 과정에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항하는 지역담론의 성격이 강하게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하나의 큰 연계를 갖고 대응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다. 19세기 말 서구적 근대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서 ‘동양’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듯이, 20세기 후반 이래의 지구화와 정보화는 동아시아 공간의 대응전략을 동질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부활시킴으로써 역내 상호작용의 제도화를 증진시키고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 관념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경험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추구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⁷⁾

6) 소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정치적 시각의 개괄적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김대중(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pp.183-242. 한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계라는 시각에서 일본의 컴퓨터 산업에서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Sangbae Kim,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 (June 2002), pp.17-36.

7)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담론과 제도협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인성,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한국과 국제정치』 20(4), (2004, 겨울), pp.107-136; 야마무로 신이찌(山室信一), 『여럿이서 하나인 아시아』 (서울: 창비, 2003), pp.182-184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간 IT협력의 틀 마련에 대한 합의는 1999년 11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2000년 11월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제안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되었던 'IT협력 이니셔티브'를 한·중·일 3국으로 확대하고, IT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정부 부처의 국장급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 이후 2차례의 국장급 전문가회의와 3차례의 한·중·일 IT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초기의 동아시아 정보문화권을 위한 추상적인 IT협력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구체적인 IT분야의 협력으로 이행하여, 현재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공개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정부,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IT협력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4년 7월 열린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중·일 IT장관회의를 상설협의체인 한·중·일 IT정상회의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아시아 IT협력의 제도화 및 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확보하였다.⁸⁾

이러한 IT협력의 구상과 실천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IT의 생산과 수요 차원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IT의 생산규모 면에서 보면, 미국의 생산규모가 2000년의 28.1%에서 2003년에는 24.7%로 감소될 것이 전망된 반면, 한·중·일 3국 IT생산 규모의 합계는 2000년의 29.4%에서 2003년의 34.0%로 증대될 것이 전망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IT생산 규모까지 합치면 넓은 의미에서 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IT생산 규모는 2003년에는 46.3%에 달해 미국의 24.7%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IT의 시장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IT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IT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2003년 IT시장 규모는 1,338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한·중·일 IT시장 규모는 1,787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1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IT시장 규모가 2003년에는 270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13.4%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8년에는 516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⁹⁾

이러한 한·중·일 3국의 IT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IT시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IT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앞당길 태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한국의 중간기술과 테스트베드 환경, 중국의 로우테크와 노동력 및 거대한 시장잠재력 등과 같은 요인들은 한·중·일 3국이 상호보완적인 비교우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IT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IT협력을 통해 증대되는 이익이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회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일반적 전망을 넘어서 동아시아 IT협력의 대향담론은 동아시아 독자표준의 추구

8)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78-80

9)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중·일 3국의 절대치가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중국이 일본의 IT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후술 하도록 하겠다.

10)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89-90

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한·중·일 IT시장이 생산과 수요의 양 측면 모두에서 세계표준의 배후지로서의 물리적 조건을 갖추었다.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는 IT분야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존재는 표준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3국간 IT협력의 의제도 차세대 인터넷과 이동통신, 공개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표준화 관련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 IT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3국간 IT정책, 기술, 표준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의 구성도 진전되고 있다. 3국의 표준화 관련 협력은 구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표준화 국제협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미의 세계표준과 핵심기술 개발에 밀려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미 주도의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문제이다. 한·중·일 IT 협력은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등에 있어 한·중·일 3국이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축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이동통신 사용 인구는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3국이 선택한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에서 3국이 통신방식을 표준화한다면 통신회사나 단말기 메이커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표준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차세대 인터넷 분야에서 광대역통합망(BcN)이나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의 표준화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¹¹⁾ 차세대 이동통신과 차세대 인터넷 분야의 표준경쟁은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표준경쟁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의 미래와 관련하여 2004년 7월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전자태그(RFID)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이 합의된 바 있다. 또한 한·중·일 등 3국이 공동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RFID 네트워크 구축에도 착수하였다.¹²⁾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꽃은 단연코 컴퓨터 운영체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Linux)의 반(反) 윈텔 담론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항하여 등장한 대안적 운영체제로서의 리눅스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들어 기존에는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리눅스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최근의 사례는 2004년 4월 3일 중국의 베이징, 7월 27일 일본의 삿포로, 12월 2일의 한국의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공개 소프트웨어 포럼’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관계부처 국장급을 대표로 하여 벌이고 있는 협의체인데 동아시아를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술개발 테스트,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 등의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협력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동아시아에서 리눅스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담론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 차원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¹³⁾

이밖에도 콘텐츠산업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동아시아 표준의 수립도 거론되고 있다. 영어 중심 콘텐츠의 획일화 경향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차

11) 『전자신문』 (2005. 3. 31)

12) 『전자신문』 (2005. 6. 21)

13)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를 포함하는 다국어로 문화 및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협력 의제이다. IT산업 분야에서 한자코드 컴퓨터처리 등에 대한 동아시아 3국 협력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한자문화권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의 한자 검색과 국제 한자 정보 DB구축의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를 반영하는 각종 인터넷 콘텐츠의 공동개발의 문제도 협의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살리는 다국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체계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화시대의 언어지역주의 또는 언어문화권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표준의 사안이다.¹⁴⁾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IT담론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IT분야의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확산(spill over)되어 지역 연대의 틀이 수립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반대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유주의적인 협력과 공동체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주의적 경쟁의 이미지가 진하게 깔려 있다. 다시 말해, IT협력의 비전은 수사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내심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상주의적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T분야의 발전이 동아시아에서 균열의 현실과 협력의 이상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항담론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좀 더 원론적으로 IT분야에서 한·중·일이 왜 협력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왜 반드시 한·중·일이라는 공간구조로 대항해야 하는지도 재고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IT담론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관념의 차원을 넘어서 다자주의적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에 걸집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IT산업의 역량이 아직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IT산업 내의 권력구조를 보더라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III. 동아시아 IT협력(2): 구조

동아시아의 IT담론의 현실화와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적으로도 힘이 뒷받침되어 글로벌 IT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직·간접적 견제

14) 정보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pp.409-429

15)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은 지역통합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An Overview,”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19; 최진우,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박건영(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pp.257-290

로 인해서 좌절하여 글로벌 지식구조의 하위구조로서의 위상에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의 문제이다.¹⁶⁾ 다른 하나는 만약에 부분적으로 대항담론의 도전이 성공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권력구조가 형성될 경우, 한·중·일의 역관계는 어떻게 구현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현재의 동아시아 IT협력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모습이 글로벌 패권으로서의 미국을 참여시키는 개방형 모델일 것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패권국(특히 중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형 모델일 것이냐의 문제이다.¹⁷⁾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와의 관계에서 본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문제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IT패권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대항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 특히 리눅스 분야의 한·중·일 협력이나 유비쿼터스 분야의 경쟁과 협력의 양상,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산업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등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국의 주도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패권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선부를 제기하는 미국의 패권적 견제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IT담론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지식패권 현황을 지식질서의 세 층위, 즉 지식 인프라, 지식 자원, 지식규범에서 살펴보자.

첫째, 지식 인프라 층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초고속 인터넷망의 연결에 있어서 대륙간의 격차 혹은 서구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연구망의 대륙 간 연결 현황을 보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북미와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현재 아태지역과 북미 지역은 6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약 10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국제연구망 용량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40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되어 있고, 동남아 국가인 태국과 10Gbps급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러시아·중국·한국을 잇는 10Gbps급의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망인 글로리아드(GLORIAD)로 연결 예정이다. 대만은 4.5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하여 북미·유럽과 기가급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요컨대, 아태지역과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의 연결은 주로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대용량의 국제연구망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북미와 유럽을 허브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6)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한 동아시아 IT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 Sum,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17) 이러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아키텍처 문제는 글로벌 생산질서에서 보이는 논쟁과 매우 유사하다. 즉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생산질서와 글로벌 패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초국적 생산네트워크(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PNs) 형태의 개방형 동아시아 질서의 경쟁 문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생산질서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itchell Bernard and John Ravenhill,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January 1995), pp.171-209; Walter Hatch and Kozo Yamamura,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ichael Borras,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김주훈,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둘째, 지식 자원 층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술경쟁력 면에서 미국이 크게 앞서고 일본과 한국이 쫓고 있으며, 중국은 상당히 뒤쳐 있는 형국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최근 발간된 한 자료에 의하면, IT분야의 절대 기술력 수준(1996-2000)을 수치로 환산할 때 미국이 16,730, 일본이 5,074, 한국이 405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¹⁸⁾ 상당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지식 자원의 층위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는 미국은 IT산업 분야의 표준 설정을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비용 대비 위험도가 높거나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들은 끊임없이 아웃소싱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발전 경로, 시장예측 등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술비전을 만들어 내고 이에 근거하여 칩의 스펙을 규정하고 스탠더드를 설정함으로써 최고 부가가치 부문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설계기술이 경쟁력의 관건인데, 현재 활동 중인 천여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업 가운데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대만기업 15%, 유럽기업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수보다 설계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미국 기업의 영향력은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¹⁹⁾

또 다른 미국의 표준패권 사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윈텔제국(Wintel empire)에서 발견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의 두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윈텔은 PC아키텍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구조적 지배력을 빚대어서 붙여진 용어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이래 윈텔표준 또는 IBM호환표준은 PC아키텍처의 사실상(*de facto*) 표준을 주도하면서 세계 PC업계에서 제국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러한 윈텔의 패권은 최근까지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아시아 3국의 공개 소프트웨어 공동 표준추진에 대해서도 견제의 चे스처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준설정의 파워는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확산된다. 정보화시대 미국의 문화제국적 지위를 표현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라는 말이 있다.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다.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등장은 기술의 우위가 문화의 지배로 전환되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²⁰⁾ 최근 들어 미국은 IT표준의 핵심 부문에서의 패권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시대 다른 분야의 표준에 대한 통제도 노리고 있다.

끝으로, 지식 규범 층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식패권은 글로벌 차원의 제도화 또는 규범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가 IT분야의 대항담론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경우 정부 간 관계 차원에서도 글로벌 패권으로부터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견제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독자표준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일 반도체 분쟁이나 일본의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을 이루는 트론(TRON)의 사례에서 미루어 보건대 미국은 WTO의 국제레짐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²¹⁾ 최근 들어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켈컴이 최근 휴대인터넷·무선인터넷

18)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IT산업경쟁력 국제비교: OECD국가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19)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pp.35-56

20)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문화제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21)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pp.111-130; 김상배,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

플랫폼의 한국산 단일표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4년 4월 7일 ‘2004년 외국의 통신 분야 통상협정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WIFI) 의무화 및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 표준화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해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²²⁾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문제는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IT산업 자체의 지식구조의 맥락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글로벌 지식구조의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동아시아 IT산업 패권의 변동 가능성이 동아시아 IT담론의 미래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만약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패권에 대한 대항전선을 형성한다면 그 실력은 얼마만큼이나 발휘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IT질서에서 현재 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패권변동이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 제도화에 주는 전망은 무엇인가의 문제도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는 거대한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중심이 일본 주도로부터 중국 주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 미래 동아시아의 지역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문제일 것이다.

먼저, 지식 인프라 층위에서 볼 때 최근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지식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미 중심의 지식 인프라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기보다는 각기 단편적인 발상에 의거해서 출현하였으며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허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제연구망의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연구망 백본이 요구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과학연구의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ABP)’ 프로그램을 UN에 제안하여 협의 중이며, 한국은 ‘동북아 IT허브론’을 제기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IT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APEC, ASEM 등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 사업으로 국제연구망인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테스트베드와 TEIN(Trans-Eurasian Information Network)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확대 발전시켜 왔으나,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 국제연구망을 구축하기가 예산 및 인력 면에서 역부족이다.

각국별 IT인프라 보급이나 IT활용도를 보면 한·중·일 3국간에는 지식 인프라의 면에서 상당한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은 IT인프라의 보급 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인터넷 호스트 수를 제외하면 PC 및 이동통신의 보급률, 인터넷 속도·비용, 인터넷 사용 수 등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15개로 중국의 0.1개보다 많지만 일본의 56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26.5% 수준에 불과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인터넷 환경에 보다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인터넷 속도·비용을 비교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저렴한 접속비용 등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

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2004, 가을) pp.101-123
22) 『동아일보』 (2004. 4. 8).

다.

한편, 인터넷 접근성, 전자상거래 활용도, 전자정부 달성도,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이 조사 대상 75개국들 중 7-21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일본은 IT 활용 측면에서 22-31위의 중위권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44-62위의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는 7위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³⁾

지식자원 층위에서 보면, 현재 한·중·일 간 IT 기술경쟁력의 경우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IT분야의 설계기술, 기술·제품개발력, 생산기술, 품질 수준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2-3년 정도 앞서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1-2년 정도 뒤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앞선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고, 중국이 빠른 IT시장의 성장과 적극적인 기술주도정책 등으로 추격할 경우 한국의 IT 기술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외국기업이 지배하던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1998년에 2%에서 2003년 5월에 51.5%로 높아졌다. 또한 2010년에 이르면 IT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추적이 더욱 더 거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컨대, IT분야에서 한·중·일 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지식구조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크게 앞서고 다른 국가가 단계적으로 따라가면서, 기술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이전되는 소위 안행형(雁行型) 패턴을 보였다고 한다면, IT산업에서는 한·중·일 간의 IT 기술수준은 분야별로 격차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은 각 세부 분야별로 각개 약진 방식으로 구미의 선진기술 도입과 토착화를 통해 격차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IT협력이 기존의 산업협력 패턴과 다르다는 점은 3국의 IT협력의 제도화에 있어 제약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동안 전통적 산업발전 패턴의 '정형성'이 3국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IT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패턴의 가능성은 협력의 '위계성'을 탈색시킨다는 점에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한·중·일 3국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IT협력의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이 추구하는 IT협력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거대시장, 일본의 기술력, 한국의 테스트베드 환경 간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구미 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라는 당초 협력의 전제조건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변할 경우 한·중·일 IT산업의 비교우위구조는 협력보다는 경쟁의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표준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중·일은 표준설정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표준에 대항하려는 시도 중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표준을 동아시아 표준으로 만들려는 경쟁도 심하다.²⁵⁾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나치게 상호 견제하거나 경쟁할 경우 동아시아 질서에 불안정의

23) 이대용,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과 협력 가능성,"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500-501

24)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90

25) 중국의 표준경쟁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 Ajit Kambil, Paul Lee, and Victor Long, "Changing China: Will China's Technology Standards Reshape Your Industry?"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Report, (Deloitte 2004)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력과 경쟁을 적절한 형태로 엮어내는 제도적인 틀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IV. 동아시아 IT협력(3): 제도

IT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제도를 어떻게 짤 것이며,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결국 이러한 제도화의 문제는 동아시아 IT협력에 임하는 행위자인 각국 차원에서 발견되는 국내적 제도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IT산업의 제도표준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IT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에 임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이나 국내적 제도들을 보면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은 IT전략을 입안·수행하는 일본·한국·중국의 미래구상과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자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IT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IT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0년에 범정부 차원의 ‘IT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2001년 e-Japan 전략 수행 이래, 일본 정부는 초고속인터넷(ADSL)의 급격한 보급 등 인프라 면에서 상당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고,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등 IT기반의 정비라는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 후 일본 정부는 2004년 e-Japan II 전략을 통해서 정보가전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일본 독자전략의 필요성이나 안전성·신뢰성의 문제나 아시아 지역을 고려하는 국제적 전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u-Japan 실현을 위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을 둔 과제의 해결, IT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기반구축 및 장애와 불안 해소 등 세 가지 기본골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²⁶⁾

일본 정부의 IT 관련 국제협력은 2003년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수행하여 아시아지역의 역할 및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침체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IT 국제협력·협조의 대상 분야는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규범 책정, 정책·제도면의 협조, 국제적인 IT의 보급(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대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은 ODA차원의 협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중·일 IT협력을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²⁷⁾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일본의 제안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ABP) 계획이다. 일본은 2003년 3월에 아시아 지역의 브로드밴드 플랫폼 접근, 역내 국가 간 광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직접 연결, IPv6망으로의 용이한 진화, 아시아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와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전송, 주요 언어 간 번역기술 개발활용, 지역 연구자의 육성 등을 담은 ABP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ABP계획은 일본이 풍부한 자금과 우수한 기술을 앞세워 이 지역의 브로드밴드 패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²⁸⁾

26) IT戦略本部, “e-Japan戦略,” (2001); IT戦略本部, “e-Japan戦略II,” (2003); IT戦略本部, “e-Japan戦略II加速化パッケージ,” (2004)

27) 外務省, “IT(情報通信技術)に関する国際協力協調,” (2001)

28) 나항렬,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분석,” 『정보통신정책』 15(8), (2003), pp.20-41

한국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먼저 IT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육성에 매진해 왔다. 19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신·방송·IT산업 관련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여 정보통신 수요정책(지식정보화·통신방송사업)과 공급정책(IT산업·R&D)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와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어 왔다. 1996년에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Cyber Korea 21’(1999)의 추진을 통해 IMF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Korea Vision 2006’(2002)이 수립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보화 전략과 비전을 안고 추진하였다. 최근 새 국가경영 전략으로 제안된 ‘u-Korea’ 구상은 오는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세계적인 IT허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부는 IT분야의 산업정책으로서 소위 IT839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⁹⁾

한국의 IT협력 구상은 명백하게 동아시아 IT협력 강화와 이동통신의 해외 진출(특히 중국 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동아시아 IT협력 구상의 기원은, 2001년 3월 기초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2년 4월 17일 확정된 ‘e-Korea Vision 2006’에서 찾을 수 있다.³⁰⁾ ‘e-Korea 2006’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제목 하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IT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후 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분야에서 IT수출 촉진 및 IT리더 국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특히, 중국을 중심으로)을 전개하고 있으며, ‘IT산업 해외진출추진위원회’ 구성하고 ‘IT산업 해외진출 종합대책(2002-2006)’을 수립함으로써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업무를 전담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및 중국 내 CDMA 확산을 위한 ‘중국CDMA확산지원단’의 운영 등은 한국 정부의 IT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³¹⁾

중국은 1953-1957년간 제1차 5개년계획(1.5계획)을 시작하여 현재 2001-2005년간 제10차 5개년계획(10.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의 WTO가입을 계기로 10.5계획 기간 중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위해 PC 및 통신망의 보급 확대, 정보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국가초고속광역망의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 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10.5계획 종료연도에는 IT사업 규모를 2000년의 2배로 확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IT산업을 중국의 최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³²⁾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과 병행하여 중국은 다양한 과학기술발전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86년 3월부터 추진해온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인 ‘863계획’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3년 미국이 전략방어계획(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1984년부터 스타워즈

29) 김상배,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 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143-163

30) 정보통신부,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

31)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97

32)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87-488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여 1986년 3월 해외 첨단기술 추적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국의 863계획은 중·장기적 경제성장과 국가안전에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³³⁾

중국의 IT 산업육성 및 대외산업협력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무역과 기술의 결합’으로 요약된다. 이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대가로 일정한 수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IT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이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구미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토착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미비한 인프라와 높은 통신비용, 전통적 거래관행·문화와 인터넷 비즈니스의 괴리, 지역 간의 심각한 정보격차,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치적 제약 등은 IT산업의 성장과 협력의 효과를 의문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산업협력 기초 하에 현 단계에서는 IT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정보화와 IT산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실질적 협조를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화와 정보화의 촉박된 비전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본격적인 동아시아 IT협력의 비전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³⁴⁾

이상에서 개괄한 한·중·일 IT정책의 기본성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발견된다.³⁵⁾ 첫째,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근대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하여 물질적 권력 자원을 강조하는 부국강병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³⁶⁾ 다만 21세기 판(版) 부국강병 담론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IT담론은 e-Japan, e-Korea, 863계획 등과 같은 IT강국론 또는 과학기술입국론이 국제적 세팅에 놓이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IT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IT는 다분히 기술·경제·산업 중심의 평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IT산업, R&D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다층위와 다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IT 중에서 2-3개의 층위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제도와 규범에 대한 강조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경제와 산업 발상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와 규범의 정비를 논하는 식의 접근이다.

33) Evan A. Feigenbaum, “Who's Behind China's High-Technology ‘Revolution’?” *International Security*, 24(1), (1999), pp.95-126

34) 김웅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93-94. 이밖에 IT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Zixiang Alex Tan, “Product Cycle Theor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Foreign Direct Investment, Government Policy, and Indigenous Manufacturing in China.” *Telecommunications Policy*, 26(1/2), (February/March 2002), pp.17-30; 이은민,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4(23), (2002), pp.1-20.

35) 김상배, “동북아 IT협력: 2020년 국가전략의 시각.”

36) 부국강병 담론의 역사적 맥락을 일본의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Richard J. Samuels,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enkichi Koizumi, “In Search of *Wakon*: The Cultural Dynamics of the Ris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in Postwar Japan,” *Technology and Culture*, 43 (January 2002), pp.29-49

둘째,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 구상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성장기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산업정책 담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사실 여태까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정보화의 비전과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정보화’의 형태가 발견된다. 동아시아 3국이 모두 대체로 산업화시기에 채택되었던 제도적 대응의 패턴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정보화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화시대의 정책이 그러하였듯이 차세대의 비전으로 동아시아 IT협력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IT기본법의 시행이나 IT전략본부의 설치, 한국의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정보화추진기금의 존재, 그리고 중국의 경우 1953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10.5계획이나 863계획 등은 바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IT협력의 목표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드라이브하려는 발상인 것이다.

끝으로, 한·중·일의 동아시아 IT담론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증진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주의적 또는 중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중심(center)이나 허브(hub)를 추구하는 담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IT담론은 평면적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둔 중심-주변의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상은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3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IT클러스터에 대한 구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쓰쿠바 과학단지, 구마모토 폴리스에 이어 후쿠오카에 아일랜드시티를 건설하고 있으며, R&D허브 개발을 통해 경기회복을 통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대덕연구단지과 인천 송도, 상암동 미디어 클러스터, 부산 센텀시티 등을 R&D 허브로 만드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의 중관춘, 상하이의 푸둥신구에 이어 광둥성 선진, 저장성 항저우, 쓰촨성 청두 등에서 R&D허브를 구축 중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지니는 문제점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이라기보다는 경쟁을 위한 교두보의 구축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로섬게임의 사고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⁷⁾

IT분야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정보화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각국 차원에서 IT분야의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적합한 제도표준의 도출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 글에서 다룰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검토할 문제이다. 이 글의 주요 관심사는 국내 차원의 ‘제도조정(institutional adjustment)’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제도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만약에 동아시아 3국이 이렇게 19세기 이래 계속되어 온 발전국가적인 지향을 고수할 경우 IT분야에서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와 제도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여태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IT협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IT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나 지역표준 협력의 강조 등 다분히 국가중심적인 접근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IT협력의 문제를 놓고 개최된 국장급 IT전문가회의나 IT장관회의 및 IT정상회의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한다. 하물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자발적

37)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pp.484-485

인 사용자·개발자 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등장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조차도 동아시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위로부터의 접근’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국가 마인드를 가지고 IT통상정책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기술표준의 조화, 상호인증협정의 추진,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 IT통상정책의 공조협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국가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협력에 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객체화되고 닫힌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구상을 상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한국의 동북아시아대론, 일본의 ABP계획 등과 같은 IT구상이 상정하는 공간은 모두 ‘닫힌 동아시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IT담론의 제시는 일단 일국 차원에서 국한되었던 공간의 발상이나 양자 관계와 같은 1차원적이고 관계적인 공간 발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국 차원을 넘어서 이웃나라들을 둘러보는 21세기의 새로운 공간구상의 발로라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근접한 이웃나라인 한·중·일의 동아시아를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전략, 그것도 글로벌 차원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IT전략의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만의 인접공간을 설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IT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마도 한·중·일 이외의 다른 동아시아,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가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객체로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 화교권의 역동성이나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구상에서 등장하는 동남아의 적극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를 동아시아를 협소한 틀 안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IT가 갖는 시공간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닫힌 공간 개념을 가지고 IT분야의 전략에 임한다면 동아시아 IT담론이 실현될 길은 요원하다. 여기에 각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가지는 지역협력 차원의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IT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공간은 전방위형(all-channel)을 지향하는 탈(脫) 허브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의 3차원(또는 4차원)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네트워크상에서 허브는 그 자체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주변의 다른 노드(node)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 환경의 개념설정은 동아시아 IT협력과 여기에서 담당하는 한·중·일의 역할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 허브형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탈 허브형 네트워크에서는 결과적으로 노드 중심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들 간의 다기능적 분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³⁸⁾

결국 동아시아 IT담론에 담겨야 할 내용은 자기중심적 발상에 기초해서 특정 국가만이 잘살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존공영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하는 공유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일 IT협력이 역외 국가들을 차별하지 않는 안과 밖으로 열린 지역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IT협력은 물론, 아세안+3나 ASEM, APEC TEL, APT-ASTAP 등과 같은 기존의 지역기구 뿐만 아니라 ITU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복합적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공간 설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급속히 주목의 대상으로서 떠오르는 미국·중국·인도 삼각협력의 공간이나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가 창출하는 공간 등도 그 사례들이다. 이러한 다층적 공간 속에서 동아시아 개념의 협소성을 넘어서 안과 밖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의 모색이 필요하다.

38)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봄·여름), pp.93-120

그렇다면 동아시아 IT분야 제도화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미래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 행위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탈근대 지역단위체의 실험으로서의 지역주의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역시 향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지구화에 대응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는 통합유럽(EU)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EU처럼 단시일 내에 초국적(supranational) 기구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반드시 EU와 같은 초국적 정치단위체의 수립을 지향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모델의 등장을 기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협력이나 통합과정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식적 기구를 통한 정부 간 협력 보다는 미국과 일본 기업 및 화교자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중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력이 더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한다.³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IT분야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 또는 ‘네트워크 아시아(Network Asia, NA)’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IT담론의 제도화를 둘러싼 모색은 정보화시대의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를 만드는 21세기 문명표준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것이다.⁴⁰⁾

V. 동아시아 다자주의 속의 남북한 IT협력

1. 남북한 IT협력의 현황

남북한 IT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통신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화 일반 등의 네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교류만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통신서비스의 남북한 IT교류협력이다.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적십자 간 직통전화기 설치된 이후 2006년 11월말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342회선의 직접 연결 전화와 17회선의 제3국을 경유하는 간접 연결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간접연결의 경우 2004년 5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에 따른 6회선 축소와 2005년 11월 경수로사업 완전중단에 따라 10회선이 철수됨으로써 현재 운용회선이 없는 실정이다. 이전까지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용을 위해 이용되었으나 개성공단의 통신망 연결로 민간용 직접 연결이 가능해 졌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로는 금강산 관광을 지원용,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지원용,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 통신망 등이 있다. 이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DO 경수로 사업용의 경우, KT(한국통신)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경수로 사업에 통신을 지원키로 하고, 1997년 5월 KEDO와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T는 경수로가 착공되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 지구에 교환기와 선로를 구축하여 동년 8월 남북간의 전화회선 8회선(공중용 4회선, 업무용 4회선) 개통하였다. 통신선로는 한전본사, KT

39)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40) 이 글에서 논의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개념은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을 바탕으로 하였다.

광화문 국제관문국, 부산 옥양국, 한일간 해저광케이블, 일본 도쿄국제전신전화국(KDD), 인텔넷 통신위성, 평양, 신포 현장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2000년 7월 2회선, 2001년 5월 6회선이 추가되어 경수로 통신지원을 위한 전화회선 수는 총 16회선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북미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경수로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회선 수도 16회선에서 10회선으로 축소되었다. 2005년 11월 경수로사업의 중단에 대해 합의하고 2006년 1월 통신망 연결을 종료하였다.

금강산 관광 지원용의 경우, 현대 측과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1998년 7월 6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부속계약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 한국전기통신공사, 온세통신이 공동으로 신청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일본 IDC사를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었다. 이후 1999년 5월과 2003년 9월 추가로 각각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10회선으로 증가되었다. 금강산관광 지원용 통신망 연결은 순수 민간사업의 통신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연결되어왔던 통신망은 남북 당국 간의 회담 지원용이나 경수로 사업건설용으로 통신망 구축 목적이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금강산관광 지원용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인 관광객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차원의 통신교류 협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지원용의 경우, 1998년 10월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9월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7월에 공사 착수하였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차원의 평양-서울 간 통신망 구축에 필요성 대두되었다. 통일부는 2000년 11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고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설치한 간접 연결 전화 8개회선 중 3개 회선을 서울과 평양 간 전화로 운영하는 통신협력사업 변경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 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서울과 평양 간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전화 2회선 및 팩스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었다. 전화 및 팩스는 평양 보통강 인근 유경호텔 옆의 현대아산종합체육관 건설 현장과 남측 근로자 숙소인 문수리 초대소에 설치되었다. 평양 건설현장과 숙소 전화를 이용하면 남한 어느 곳으로나 통화가 가능하나 서울에서 전화할 경우 북한이 지정한 평양 시내 3개 전화번호로만 통화할 수 있었다.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2002년 6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 3명, KT,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 통신업계 관계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남측과 북한 체신성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한 북측의 통신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회담 결과 남북은 평양·남포 일원에서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서해교전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고 관련 업계의 지분배분 등 이해타산에 따른 입장 차이와 CDMA 기술의 대북 반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의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7월에 KT와 함께 전화 2000회선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KT는 이미 2001년 11월에 남방한계선 이남까지 광케이블 매설을 완료하여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2002년

12월 남북 당국 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착공식을 2002년 12월말에 예정되었으나 군사, 정치관계 악화로 지연되어 2003년 6월 30일에 개최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필요한 통신인프라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의 통신공급을 위하여 KT와 조선체신회사 간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2004년 12월) 및 개성공단 통신공급에 관한 부속 합의서(2005년 3월) 체결되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지구의 통신망 구축은 남한의 기술 및 장비를 반입하여 설계, 시공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성과 관문점 간의 광전송로를 건설하고 지구 내에 통신센터를 건립하여 1차적으로 입주기업들에 개성공단과 남한지역 간에 전용회선서비스, 유선 전화, 이동 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EAR과 관련하여 KT가 통신장비 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미 상무부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2월 개성공단-남측간 228 회선의 통신망이 개통되어 최초로 남북간 민간용 직접 전화연결이 실현되었으며 2006년 11월말 현재 303회선을 사용하면서 시범공단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IT교류협력 분야 중에서 두 번째는 IT하드웨어 분야의 교류 협력이다. IT하드웨어 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일반 제조업과 같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위탁가공 및 단순임가공 형태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컴퓨터 모니터 생산업체인 IMRI는 1998년 4월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임가공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6월부터 국내에서 북한으로 PCB 조립공정의 생산설비와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기술을 이전하였다. 이후 1998년 10월 1차 생산품 반입, 2000년 1월 평양공장에 완제품 조립라인 완공, 7월부터 17인치용 PCB 기판을 조립생산, 조립물 전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모니터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하나로통신은 2000년 7월 평양에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ADSL 신호배분기(splitter)의 위탁가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내시장의 포화, 높은 불량률 및 납품지연, 물류비 및 통관비 등 높은 간접비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다수의 정보통신 부품업체와 기기업체가 대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초기 단계에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보통신 하드웨어부문 경험사업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 및 무관세 혜택이외의 제반 생산여건이 아직까지는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수출입관리규정 및 바세나르협정 등 북한에 대한 국제규제로 인해 IT관련 설비의 반입이 어렵다는 점도 IT하드웨어부문 경험사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경우 IT 임가공사업의 유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IT 임가공사업의 주요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물류비의 대폭적인 절감이 예상된다. 매직마이크로(LCD 모니터), TS정밀(반도체, 전자부품), JC컴(광통신부품) 등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IT교류협력의 세 번째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소프트웨어 부문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과 북한 소프트웨어의 수입 형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시작한 사업으로 하나비즈닷컴은 평양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중국 단둥 지역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 수행방식은, 남측 하나비즈닷컴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용역을 수주하여 단동의 하나프로그램센터에 의뢰하면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단동에 상주하는 30여명의 인력과 북한 내의 평양정보센터가 연

게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는 방식이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주요 개발실적은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유니코드(Unicode) IME개발 외에 음성인식 및 멀티미디어 분야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였다.

삼성전자는 2000년 3월 13일 72만 2천 달러를 투자,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에 의뢰해 문서요약,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휴대폰용 게임 및 응용, 휴대폰용 중국어 문자인식,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를 공동 개발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 사업을 정부로부터 동시 승인하였다. 이후 2004년 5월까지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24건의 개발과제를 완료하였으며 15건의 개발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하나로통신은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함께 2001년 4월 국내 최초로 남북 합작 3D 스폿 애니메이션인 ‘게으른 고양이 덩가’를 완성하였다. 2002년 8월부터는 3D 애니메이션 ‘뽕뽕뽕 뽕로로’의 합작 제작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총 22만 달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EBS에서 방영한 아동교육용 3D 애니메이션 TV시리즈 뽕뽕뽕 뽕로로는 평균 5%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야미도 범태와 협의로 북측의 4.26과학교육영화촬영소와 남북 공동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추진하였다.

훈넷은 2001년 12월 29일 북한의 조선장생무역총회사와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20만 달러 투자를 승인 받았다. 훈넷과 조선장생무역총회사는 공동 출자를 통해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인 조선북권합영회사를 설립하고 평양에서 인터넷북권 사이트와 PC방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훈넷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업 승인범위를 벗어난 실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박 및 북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2004년 1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승인이 취소되었다.

유니코텍은 IMRI가 일본 조총련계 회사와 합자하여 설립한 소프트웨어 임가공 및 판매 업체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평양에서 임가공하거나 기존에 북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다국어 번역프로그램 등)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이밖에 북남교역(모바일게임), KT(전화음성데이터수집 및 관련 프로그램개발사업), VK(휴대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알티즌하이텍(CTP관련 기술개발 및 생산·판매) 등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였다.

북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나로통신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세계 컴퓨터바둑대회에서 1998년과 1999년 2회 우승을 차지한 바둑 게임 소프트웨어 ‘은바둑’ 최신 버전에 대해 인터넷 온라인 판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의학 정보제공회사인 허브메디닷컴은 북한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합작사인 아사히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체질분류 및 진단체계 프로그램인 ‘금빛말’을 정식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에는 오피플닷컴, 삼성전자 등에서 바둑, 장기 등의 게임 프로그램 수입하였다.

끝으로 남북한 IT교류협력의 네 번째 분야는 정보화 일반 분야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류협력 사업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및 표준화 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남교역(www.nkmall.com) 등이 북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고려샵(www.coreashop.com), 북한마을(www.snkorea.com), 남북하나라닷컴(www.snhanaro.com) 등 기존 사업자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이 남북합작 형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한의 대학교수와 연구원이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남한교수들의 북한 인력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가 진행되었다. 2002년 6월 한양대 교수 2명이 입북하여 하루 6시간 4주씩 2차례로 나누어 김책공대내의 컴퓨터정보센터 대학원생과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생 1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운용체계 구현, 데이터베이스 응용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현 강의하였다.

정보통신 표준화를 위한 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에서 학술교류형태로 199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글 컴퓨터 처리, 컴퓨터 자판, 컴퓨터 용어 등의 기초분야의 표준화를 위해 정보처리학회, 한국국어정보학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부터 남북 컴퓨터전문가가 참석하는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를 북경에서 개최(총 4회)되었다.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도 남측 정보통신용어사전, ITU-T/R 용어 정의집을 간접적으로 북측 당국에 2-3차례 전달하였다. 벤처기업협회는 2006년 5월 북측 인력 개발, 교육, 기술보급 등을 위해 IT관련 서적 3만권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2. 남북한 IT협력의 방향 모색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볼 때, 남북한 IT분야의 초보적 협력이라는 한계에서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할 남북한 IT교류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현재 정치군사 중심의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서 장밋빛 희망과 회색빛 비관을 오락가락하는 남북한 IT협력의 현황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조금더 남북한 IT협력 문제를 풀려는 단기적 정책처방 그 자체보다는 동아시아 또는 글로벌 IT질서의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난항을 염두에 둘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 IT협력 관련 사안 중에서 주변상황의 전개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고려할 때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 정보화 전문가들의 정보 교환 및 학술적 차원의 교류, 정보화 부문 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 및 정책 조사연구 지원, 대북 관련 정부업무의 정보화 및 통일 관련 민간서비스의 인터넷처리 지원, 인터넷을 활용한 이산가족 찾기 사업 공동 추진, 남북한 디지털 콘텐츠 교류 기반의 공동조성 등이 1차적으로 고려 가능하다.⁴¹⁾

둘째, 동아시아 IT담론과 남북한 IT담론과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IT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IT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후보는 단연코 공개소프트웨어 분야이다. 예를 들어, 최근 IT표준화 분야 공개 소프트웨어(리눅스) 분야에서 한중일(특히 중국)이 보이는

41)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진전된 2단계 방안으로는 남북한 주민간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접촉을 단계적으로 허용, 남북한 인적교류 추진 및 북한의 정보화 관련 인력교육 지원, 국내외 조건을 고려한 정보화 분야 대북 기술협력의 추진, 북한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및 북한 IT인력 초청 연수 확대, 남북한 전자거래의 호환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북한내 PC방 설치 운영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3단계 사업으로는 북한에 소재한 역사적 문화재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지원, 남북 정보화 부문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의 정비, 한민족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통한 동질성 회복, 남북한 정보화교류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정보문화권 형성을 위한 기초마련, 남북한 공동으로 ‘한민족 알리기 웹사이트’ 구축 운영,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서의 공동보조 추진 등이 있을 수 있다.

관심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역량의 활용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리눅스 공동개발 사업에서 북한이 담당할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눅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독자표준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IT교류 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문제인데, 유선 IT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통신을 전파시키는 문제는 동아시아 표준화의 시급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축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이동통신 사용 인구는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일 3국과 북한이 선택한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현재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남북한 IT협력을 위치시킬 경우 가장 쉽게 링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부터 교류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북한-중국의 삼각 링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사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담론은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재조명되는 동아시아 공간을 그러한 대항 전략의 배후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 남북한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중국이 담당할 역할을 볼 때 향후 많은 사업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및 남북한 IT협력의 이해관계 교차점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양자 관계 및 동아시아 다자주의 틀에서 보는 남북한 IT협력의 분야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한중일 3국 및 북한의 비교우위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담당할 가치사슬의 전문화 고리를 개발할 수 있다. IT하드웨어 부문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분야의 교류협력이 단단한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냉정히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IT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아시아 차원의 경쟁과 협력의 담론이 보이는 긴장관계를 남북한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한 문제는 정치군사 영역에서는 지나친 경쟁 담론에 치우쳐 있었으며, IT영역에서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협력 담론으로만 경도된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이 관계를 푸는 것이 숙제인데,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겉모양은 협력이지만 속으로는 경쟁의 담론을 강하게 품은 IT분야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이 보이고 있는 부국강병론적 IT정책과 북한의 강성대국론에서 출발한 IT정책을 어떻게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담론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끝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의 동아시아와 남북한 IT협력의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수립이 배경적 요인으로 필요하다. 이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IT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북한 IT협력이 남북한만의 닫힌 통일 비전에 갇힌 IT협력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포괄할 수 있는 IT관련 정책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IT협력과 동아시아형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모색을 연결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현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남북한 IT협력의 분야에서 남북한 및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윈-윈 게임으로 인식되는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소란스러울지라도 어떠한 형태로건 남북한 IT협력의 전략은 준비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색에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 IT협력의 문제를 미리 놓아 보고, 이후에 조건이 성숙했을 때 공

략할 길목을 지키는 방안일 것이다.

VI. 맺음말

이 글은 동아시아 다자주의의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IT협력의 세 가지 측면, 즉 관념, 권력, 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IT담론의 내용과 그 현실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남북한 IT협력이 추진할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 현재 정치군사 중심의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서 난항을 겪고 남북한 IT협력의 현황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또는 글로벌 IT질서의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이 글에서 파악한 동아시아 IT담론은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재조명되는 동아시아 공간을 그러한 대항 전략의 배후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IT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IT패권과 동아시아 IT산업에서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과제들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동아시아 IT담론이 제도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IT협력의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남북한 IT협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IT협력에 임하는 한국의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등장한 남북한 및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이 글은 앞서 펼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남북한 IT협력의 추진과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및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복합전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IT담론에 혼재되어 있는 ‘협력 담론’과 ‘경쟁 담론’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IT담론은 역외에의 대항을 전제로 한 역내의 협력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 담론, 즉 부국강병 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 및 제도화의 전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부강(富強)국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된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경제와 산업적 이슈의 일부로서 IT를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IT협력의 전략은 우선적으로 기술·경제·산업 발상을 중심으로 설정된 IT의 상(像)을 다층위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IT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이해하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에 대한 종합적 발상이 필요하다. 협력담론과 경쟁담론, 그리고 기술·경제의 발상을 넘어가는 지점에 남북한 IT협력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한 문제는 정치군사 영역에서는 지나친 경쟁 담론에 치우쳐 있었으며, IT영역에서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협력 담론으로만 경도된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IT담론에서 갈등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 활용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결집

전략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을 동아시아 공간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IT담론은 동아시아의 행위자로 미국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미국 없는 동아시아의 구상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중국에 대한 견제의 방책을 너무 쉽게 제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국의 주체적 활용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 한국은 다른 비(非) 제국들의 제국 활용 전략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세력균형을 고민하는 ‘지지학(地知學)’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행위자를 선별하고 미국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IT협력에 글로벌 세력으로서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이냐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미국은 남북한 IT협력을 지원하는 세력이기 보다는, 대북 전략물자에 대한 제한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을 주는 세력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동아시아 IT담론 내에서 명시적·암묵적으로 갈등하고 발전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모델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하튼 동아시아 IT담론이 실질적인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부강국가 또는 발전국가의 모델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존공영의 네트워크만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산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구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업체제/네트워크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노드(value node)’를 담당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굳이 명명하자면, ‘발전형 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s)’⁴²⁾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IT협력 및 지역협력의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IT협력 및 남북한 통일의 문제와 연결된다.

42) 산업화시대의 소위 ‘관료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bureaucratic state)’ 모델을 넘어서는 정보화시대의 소위 ‘네트워크 발전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ean O’Riai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참고문헌>

- IT戰略本部, “e-Japan戰略II,” (2003)
- IT戰略本部, “e-Japan戰略II加速化パッケージ,” (2004)
- IT戰略本部, “e-Japan戰略,” (2001)
-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IT산업경쟁력 국제비교: OECD국가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3)
-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 1(1), (2001), pp.3-38
-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pp.365-387
-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지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57-82
- 김상배, “동북아 IT협력: 2020년 국가전략의 시각,”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제13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5)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일본연구논총』 제17집, (2003), pp.75-101
- 김상배, “문화산업과 정보문화,”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서울: 풀빛, 2004), pp.151-155
-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pp.33-58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pp.93-120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pp.93-120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004), pp.255-276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pp.409-429
- 김상배,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 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143-163
-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pp.111-130
- 김상배,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2004) pp.101-123
-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일본연구논총』 제17집, (2003), pp.75-101
- 김주훈,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김주훈,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나항렬,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분석,” 『정보통신정책』 15(8), (2003),

pp.20-41

『동아일보』 (2004. 4. 8).

민병원, “네트워크의 국제정치: 새로운 이론들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4).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35-56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35-56

백낙청(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서울: 창비, 2004)

야마무로 신이찌(山室信一), 『여럿이서 하나인 아시아』 (서울: 창비, 2003)

外務省, “IT(情報通信技術)に関する国際協力・協調,” (2001)

이대용,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과 협력 가능성,”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95-522

이대용,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과 협력 가능성,”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95-522

이은민,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4(23), (2002), pp.1-20

이은민,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4(23), (2002), pp.1-20

장인성,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한국과 국제정치』 20(4), (2004, 겨울), pp.107-136

『전자신문』 (2005. 3. 31), (2005. 6. 21).

전재성,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0), pp.341-358

정보통신부,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

최진우,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박건영(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pp.257-290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2004)

하영선·김상배(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2006)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김대중(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진통과 현대, 1999), pp.183-242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67-494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67-494

- Barabási, Albert-László,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2002)
- Bernard, Mitchell and John Ravenhill,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January 1995), pp.171-209
- Blyth, Mark,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Borras, Michael,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Feigenbaum, Evan A., "Who's Behind China's High-Technology 'Revolution'?" *International Security*, 24(1), (1999), pp.95-126
-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 (1971)
- Haas, Ernst B., *When Knowledge is Power: Three Models of Chan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Haas, Peter M.,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7)
- Hatch, Walter, and Kozo Yamamura,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Kambil, Ajit, Paul Lee, and Victor Long, "Changing China: Will China's Technology Standards Reshape Your Industry?"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Report*, (Deloitte 2004)
- Katzenstein, Peter J.,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Kim, Sangbae,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 (June 2002), pp.17-36.
- Koizumi, Kenkichi, "In Search of *Wakon*: The Cultural Dynamics of the Ris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in Postwar Japan," *Technology and Culture*, 43 (January 2002), pp.29-49
- Leander, Anna,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pp.184-196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An Overview,"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19
- Morris-Suzuki, Tessa,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94)
- O'Riain, Sea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3-47
- Samuels, Richard J.,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Sell, Susan.,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94)
- Sum, Ngai-Ling,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2003), pp.373-398
- Takahashi, Takuma and Fujio Namiki, "Three Attempts at 'de-Wintelization': Japan's TRON Project, the US Government's Suits against Wintel, and the Entry of Java and Linux," *Research Policy*, 32(9), (October 2003), pp.1589-1606
- Tan, Zixiang Alex, "Product Cycle Theor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Foreign Direct Investment, Government Policy, and Indigenous Manufacturing in China." *Telecommunications Policy*, 26(1/2), (February/March 2002), pp.17-30
- Urry, John, "Small Worlds and the New 'Social Physics,'" *Global Networks*, 4(2), (2004), pp.109-130